

“내란세력, 체포·고문·악물사용 계획 검토했다”

민주 박선원 의원, 문건 공개… “자백유도제 사용 등 단계적 체계화 검토
내란세력, 계엄령을 ‘계몽령’ 이라 미화… 책임 규명 미뤄선 안돼” 강조

작년 12·3 불법계엄 당시 내란세력이 정치인 체포·고문·악물 사용 계획을 검토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문건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공개한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내란세력은 △신체적 고문 △정신적 고문 △자백유도제 사용 등을 단계적으로 체계화해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백유도제의 경우 진정·수면제 계열의 프로포폴, 마취·진통제 계열의 케타민·펜토달 나트륨, 항정신성 정신과 약물인 벤조디아제핀 등이 포함

돼 있었다. 박선원 의원은 “정치인과 시민을 체포·고문해 내란세력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미이다”며 “이 약물들은 피조사자의 불안을 낮추고 저항을 약화시키며, 기억을 흐릿하게 해 진술을 통제하고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배열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체적 고문 방식으로는 △찬물을 반복적으로 끼얹거나 △열곡을 천으로 덮고 물을 붓는 물고문, △눈을 가린 상태에서 총이나 전동드릴을 몸 가까이 들이대 공포를 유발하는 모의 처형 등이 언급됐다. 박 의원은 “결으로 드러나는 상처는 최소화하지만 몸과 마음을 동시에 붕

괴시키는 흔적 없는 고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신적 고문으로는 △사회적 고립 및 독방 감금 △가족에 대한 위협 협박 △인격적 모욕·가족 비하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인간의 심리적 취약점을 겨냥해 굴복을 유도하는 방식이 검토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건 작성은 윤석열·노상현 등 당시 지휘라인의 명확한 지시와 보고 체계를 기반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며 “노상원은 노태우 중앙안전관 위원장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야구방망이 준비를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2.3계엄당시 고문 및 악물투입 검토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논의가 지연되고 책임 규명이 흐려지는 사이, 내란 세력들은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미화하고 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본질이 희미해지고 역사적 책임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조속 처리 요청

민주 이성운 의원
추미애 법사위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을)이 지난 10일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의 신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 면담에는 전북지방법원호사화과 전주가정법원유치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전북은 전국 8개 가정법원 중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로, 전주지방법원이 가사·소년보호 사건을 모두 처리해 도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전주지법은 최근 3년간 평균 1,441건의 가사사건을 처리해 울산가정법원보다 연평균 221건 더 많은 사건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전주에 가정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지원을 두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법원행정처와도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날 추 위원장은 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본예산 심의 돌입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11일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최종 심사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할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999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보다 8.78%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6.44% 증가한 1조 5,684억 원, 특별회계는 27.78% 증가한 2,315억 원이다.

한편 2026년 예산안은 오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군산=김민호 기자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현장행정 11일 김광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현장행정으로 전주 서원 노인복지관 및 제설전진기지를 찾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한파쉼터 운영 현황과 도로 교통 불편 방지를 위한 제설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산단 LNG발전소 재검토해야”

도의회 “새만금 분산 배치가 해법” 정부에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11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추진 중인 LNG 발전소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반도체 국가산단을 새만금으로 분산 배치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밝힌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메시지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 지역으로 산업 입지를 넓혀야 한다는 의미이자, 지역 균형발전을 중시한 국정 철학의 표현”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특위는 정부가 용인 산단에 추진 중인 LNG 발전소 계획이 이미 여러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주민 수용성 부족, 대규모 탄소배출, 국제 환경규제 충돌 위험 등이 있어 추진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용인에 계획된 LNG 발전소 3기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97만톤으로, 삼정전자 전 세계 공장의 배출량(946만톤)을 웃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위는 “이는 국가 탄소중립 전략과 정면으로 충돌할 뿐 아니라, EU 탄소규제로 인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위험한 구조”라고 평가했다.

또한 용인 산단의 재생에너지 자체 조달 능력이 매우 부족해 대부분의 전력을 외부에서 끌어와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비만 73조 원에 달하고, 송전 경로 곳곳에서 주민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특위는 반면 새만금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고, 서남권 해상풍력까지 포함하면 총 7G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해 반도체 산업의 초기 전력 수요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은 간척지 기반이라 주민 반대가 거의 없고, 최소한의 송전선로만으로도 전력 공급이 가능해 경제성·실현 가능성 모두에서 용인 산단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전북이 반도체 기업의 인재 수요를 충족할 역량을 갖춘 지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위는 전북대학교 반도체기술학과가 1990년대부터 반도체 소재·공정 분야에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해 왔고,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 인력

을 꾸준히 배출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은 부지나 전력 문제뿐 아니라 인재 공급이 좌우한다”며 “전북은 이미 검증된 인재 배출 시스템을 갖춘 만큼, 새만금 분산 배치는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합리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새만금 분산 배치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절감 효과와 소수십 조 원의 송전선로 건설비 절감, 연간 97만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용인과 새만금을 함께 개발하면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과 국가 균형발전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특위는 정부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소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산단을 새만금으로 분산 배치할 것과, 내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용인 산단의 전력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편성하고, 송전선로 계획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위해 새만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최근 들어서 많이 둔화”

김윤덕 국토부장관, 집값 과열 논란에 “침소봉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 봐야… 상승세 둔화”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내와 수도권을 비롯해 다양한 집값과 서민들의 주택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단체장을 만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은 최근 도내와 수도권을 비롯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집값 과열 논란에 대해 “침소봉대”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특히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급 대책 이후 집값 상승 폭을 지속하는 야당의 비판이 제기되자, 김 장관은 시장 전체 흐름을 봐야 한다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희성 기자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집값이 4.4%나 올랐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일부에서 하고 있는 주장을 침소봉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최근 들어서 많이 둔화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를 과하게 얘기할 경우에 불필요하게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안내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팔복동 고형연료 소각장 설치 허용 불가”

‘전주시장 출마’ 조지훈 민주 원내대표 특보

전주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조지훈 원내대표 특보가 팔복동 산업단지에서 추진되는 고형연료 소각장 추가 설치를 두고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특보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고형연료 소각장은 시민의 삶과 안전을 침해하는 대표적 위험시설”이라며 “추가 설치를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팔복동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1심 승고를 앞두고 시민들은 지난 8일부터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다시 시작했다.

조 특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행정의 잘못을 시민이 고스란히 떠안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소각장 설치를 승인했다가 주민 반대에 밀려 입장을 반복했지만, 기업이 제기한 소송이 이어지며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반약 폐쇄해 발생하는 배상금도 결국 시민의 부담이 된다”며 행정의 책임을 지적했다.

조 특보는 “소각장 예정지 주변에는 ‘유해 영향권’에 포함되는 학교만 23

곳”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고형연료 시설이 아이들과 가까운 곳에 들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조 특보는 지난 11일에 이어 관련 반대 집회에도 다시 참여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전주시정의 중심이 시민의 삶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형연료는 이미 2019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며 위험성이 공식 확인됐고, 전주에는 기존에도 고형연료 소각시설이 5곳이나 존재한다. 그럼에도 또다시 시설 설치가 승인된 것은 전주시정의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는 비판이다.

조 특보는 “전주시정의 모든 기준을 시민의 건강과 안전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법원도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팔복동 소각장 설치를 단호히 반대한다. 시민과 함께 전주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지훈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를 맡고 있으며, 제11·12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제9대 전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상임대표로 활동 중이다. /이만호 기자



이만재 정읍시의회 부의장

ESG학회 우수조례 ‘최우수’

정읍시의회 이만재 부의장이 한국ESG학회가 주관한 우수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가치를 반영한 조례 제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입법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 부의장은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시민 복지 향상,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례’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조례’는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수상 소감으로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ESG 가치에 기반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읍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도의회, 인구·재정·경제정책 연계 전략 마련 정책토론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진안)이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재정·경제정책의 연계 전략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성원 국립군산대학교수가 발제하고, 전용태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어 권요안 의원, 오은비 의원, 임종영 의원 등 인구위

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이국용 국립군산대학교 교수, 이현서 정책기획관, 조윤정 인구청년정책과장, 손순이 기업유치1팀장 등이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재정·경제정책의 연계 전략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전용태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열악한 재정 여건과 초저출산·초고령화의 가속화, 청년층 인구 유출 등

으로 인해 인구 규모가 다른 시도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구조 또한 날로 취약해지고 있는 복합적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라며, “단편적 대책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실효성 있는 정책 조합, 그리고 부서 간 역할 분담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통합 전략과 총괄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